

## 수능 1주일 연기... 23일 치른다



어린이집 담벼락 '와르르'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국도 지진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주택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각각 11.3%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지진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어린이집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 김상곤 부총리 “수험생 안전 최우선·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포항 시험장 곳곳 지진으로 균열·파손... 1993년 수능 도입 후 처음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관련기사 7면>

광주·전남 수험생 3만7949명은 16일 애초 지정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수능일이 오는 23일로 연기되면서 향후 수능 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 시험 시행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수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포항지역 등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능 연기를 요청했다”며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 14개교를 전수점검한 결과 포항고·포항여고·대동고·유성여고 등에 균열이 발생했고 예비시험장인 포항 중앙고에도 일부 균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 상

황이 아니므로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고사장이 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데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능이 자연재해로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005년에는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2006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고, 201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문에 역시 일주일 연기됐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연초에 수능 연기 사실이 발표돼 학생들이 시험 직전에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

15일 예비소집이 진행됐지만 건물 안전 문제나 자신의 고사장을 아는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험 장소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차관을 반장으로 운영하던 수능 비대위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운영하면서 연기에 따른 종합적 대책을 수립

하겠다”며 “시험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학 및 대학교협과 협의해 대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적통지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

### 민간공원 개발 1단계 사업자 29일 결정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인 수량·마복·송암·봉산공원의 우선협상자가 이달 안에 결정된다. 나머지 21개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 여부도 16일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거버넌스(이하 민관거버넌스) 산하 공원조성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15일 광주시,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3명, 시민평가단 10명을 구성해 지난 9월 8일 접수된 12개 제안서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오는 29일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위원단은 광주시 산하 위원회 위원 중에서

만, 수능 체제에 2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6일로 예정됐던 성적통지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 송덕고 장광재 교사는 “급한대로 학생들에게 ‘시험장과 학교에 나오지 마라’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면접·논술 등 일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교육부 방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선정됐으며, 시민평가단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민관거버넌스가 지난 1일 제5차 회의에서 결정된 스카이라인 유지, 시민점근성, 장애인 접근성, 비공원시설 면적 등의 기준에 의거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협상기준에는 20층 이하 고도 제한, 비공원 개발 면적의 대폭 축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송암과 마복에 각각 3개와 4개, 수량과 봉산에 4개와 1개 등 모두 1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 광주·전남 주택·건물 90%이상 지진 무방비

포항서 5.4규모 지진... 내진설계 광주11%·전남 2% 뿐

### 광주·전남서도 건물 흔들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대피소등이 빚어지는 등 전국이 지진 공포에 시달렸다. 이번 지진이 큰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광주·전남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도 규모 6.0 초반대를 넘어서는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각종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지진에 취약한 낮은 층수나 오래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진설계 고작 2.1%...대형참사 우려=광주·전남지역 주택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각각 11.3%·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다수의 건물이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것으로, 중규모 지진(5.0)이 일어나더라도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는 주택 9만7809동 중 내진설계가 확보된 주택은 11.3%인 1만1109동이다. 건물 종류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6.5%(6364동), 단독주택 12.1%(9만1445동), 학교 36.3%(347동), 공공업무시설 11.3%(67동) 등이다.

전남은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 전체 42만5986동 중 2.1%인 9247동뿐인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59.1%(4108동), 단독주택 1.2%(5139동), 학교 10%(383동), 공공업무시설 5%(193동) 등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조차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광주·전남 모든 지역이 지진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광주·전남 지진 급증=을 들어 이날 현재 광주·전남에서만 모두 15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5건보다 세 배 많은 수치다.

광주에선 지난 2월 18일과 3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전남에선 여수·순천·구례·고흥·보성·영광 등지에서 적게는 1차례, 많게는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문제는 올 들어서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세 차례 이상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진 횟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회 ▲2013년 5회 ▲2014년 5회 ▲2015년 3회 ▲지난해 5회 등이다. 이는 광주·전남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정부는 2005년 이후 내진설계 기준을 ‘3층 이상, 500㎡ 이상’으로 강화해 지진 규모 5.5~6.5 수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기준은 국민안전처 등이 추정한 국내 최대 지진 규모 6.8~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도입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2층 이하,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 적용 의무대상이 아닌데다, 강제로 적용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형편이다.

◇포항 지진 역대 두번째 규모=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 역대 두번째 규모다.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지만 진원은 더 얕아 전국적으로 흔들림이 감지됐고, 체감 위력은 경주 지진보다 더 컸다. 규모 2.4에서 4.6에 이르는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2면에 계속>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광주형일자리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적정임금(연대임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합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원하청관계개선으로 공정한 산업질서를 실현합니다

노사책임경명(노동자책임경명)으로 투명경명과 노사상생협력을 실현합니다

